

산업단지정책과	조선특구지구 산단 중복 지정·승인 및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로 신규 국가산단 신속 추진
성과 요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조선특구지구 산업단지 중복 지정·승인, 기업규제 적극 개선 ◦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, 개발 가용지 발굴 ◦ 규제 개선을 통한 신규 국가산단 신속 추진 기반 마련 ◦ 산업단지 업종변경으로 입주기업 활동 지원

□ 추진개요

- 조선특구지구, 사업 추진 난항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중복 지정 추진
 - 행정절차 및 기간 단축으로 사업 조속 추진 및 기업 조기 운영 가능
- 기업 선호 입지 발굴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
 - 개발 가용지 발굴, 개발계획 및 공급방안 마련 등으로 기업 유치 견인
- 제도개선을 통한 방위·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신속 추진 기반 마련
 - 신규 국가산단* 추진 걸림돌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·각종 규제개선 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
 - * 창원 방위·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- 민선8기 미래먹거리 전략산업(방위·원자력) 생산거점 조성
 -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행정절차 간소화, 기본협약 체결 기간 단축

□ 추진실적

- 고성 양촌·용정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승인('23.10.19)
 - 간소화법에 따른 신속한 절차 추진 및 통합심으로 산업단지 지정 단축(3→1년)
 - ※ 「지역특구법」에 따른 지정·승인 시 3년 이상 소요
 -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지역 및 산업 여건 변화 신속 대응 가능
-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('23.4.28)
 - 권역별·산업별 발전전략 설정, 가용후보지 분석 및 의견수렴·자문 등
- 예비타당성조사(KDI) 위한 기본협약 추진 걸림돌 해소
 - 예타조사에 긍정적인 평가 반영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¹⁾ 포함으로 필수 행정절차²⁾에 12개월 소요
 - 1) 미분양 산업용지 기초지자체 매입 / 2) 행안부 중앙투자심사, 시의회 의결 필수
 - 제도개선(절차간소화) 중앙부처 건의·공론화·컨설팅 등 노력으로 조건부 협약체결 가능 방안 마련

* 중앙지방협의회(9.8.),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(9.18.), 지방시대위원회(10.12.) 안건 제출

-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 : 1건
 -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('23.11.23.)
 - 변경내용 : 사업시행자 변경[대우조선해양(주) → 한화오션(주)]
-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: 3건
 - 양산 덕계경동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('23.9.7.)
 - 변경내용 : 관리기본계획 최초 수립
 - 양산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('23.10.19.)
 - 변경내용 : 업종추가(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)
 -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('23.11.9.)
 - 변경내용 :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입주업종 추가(연구개발업 등 14종)
-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: 1건
 -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('23.8.31.)
 - 변경내용 : 농공단지계획 반영 및 업종추가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)

□ 주요 성과(결과)

- 제도개선, 기본협약서(안) 마련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(12개월) 단축
 - 창원 방위·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 신속 추진 기반 마련
 - ⇒ (경제효과) 직접투자 7조 9천억원, 생산유발 15조 2천억원 / (고용효과) 직접 18,590명, 유발 51,601명
- 도내 조선특구지구(내산, 장좌, 양촌·용정), 산업단지 중복 지정으로 기업 조기 운영 기반 마련,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
 - (매출액) 내산, 장좌산단 8,227억원('22년 기준) 매출 달성
 - (고용현황) 내산, 장좌산단 3,377명('22년 기준) 직원 고용 운영
 - ⇒ 산업단지 지정 효과 : 3조원 조기 수주, 종사자 3천명 조기 고용 예상(연매출 1조 5천억)
- 개발 가용 후보지 입지분석 등을 통해 개발 가용지 43개소 발굴
 - 개발 가용지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방향 검토('23.12.)
-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관리기본계획 업종변경 추진으로 산업용지 유희화 방지 및 미분양 부지 최소화